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 22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지난 2월 GM본사 폐쇄 결정…5월 31일자로 조치
현대중공업 이어 군산공장도 폐쇄돼 군산경제 비상
200여명 우선 전환배치…400명 3년간 순차적으로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연 지 2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군산공장은 지난달 31일 공장을 폐쇄하고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들도 이날을 기점으로 모두 퇴직절차가 마무리된다.

군산공장 폐쇄는 지난 2월 제네랄 모터스(GM) 본사가 폐쇄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폐쇄 발표가 있은 뒤부터 군산공장은 대부분 가동을 중단해 사설상 가동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군산공장의 폐쇄로 이곳에서 생산하던 크루즈와 올란도는 단종 상태에 들어간다.

군산공장은 1996년 대우자동차 공장으로 역사를 시작했다. 그해 12월 '누비라 1호차'를 생산한 데 이어 레조와 누비라2를 내놨다.

제네랄 모터스(GM)가 회사를 인수한 2002년부터는 시장을 GM 대우로 2011년에는 '한국지엠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꿨다. GM이 인수한 후 군산공장은 라세티와 라세티 프리미어, 쉐보레 올란도, 올 뉴 크루즈 등의 생산을 맡았다.

군산공장은 군산 알버니를 매입해 만든 129만㎡(약 39만평)의 부지에 연간 27만대 규모의 완성차 승용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한국지엠의 생산기지였다.

차체-프레스 공장, 도장-화성공장, 조립공장, 딜렉션진공장, KD 공장 등 7개의 주요 단위 공장과 주행시험장, 출고장, 5만톤급 수출전용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자동차 수출전용부두도 함께 갖췄다. 이곳에서 생산된 차량은 모두 이 수출전용부두를 통해 130여개국으로 팔려나갔다.

자동차산업의 불모지였던 전북에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 지어지자 지역 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상당했다. 설립 후 20년 가까이 협력업체 130여곳과 함께 1만2000여명을 상시 고용했다. 전북 수출의 30% 군산 수출의 절반 이상을 도맡기도 했다.

이곳에서 생산하던 차량이 잘나가던 시절에는 배정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밤낮 없이 생산 활동에 집중할 정도였다.

2011년 26만대의 차량을 생산하

며 최고점을 찍었던 군산공장은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철수와 세계경기 침체, 내수판매 부진 등으로 생산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폐쇄설 위기설이 나돌자 군산시와 시민들이 나서서 군산공장 폐쇄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쉐보레 브랜드가 유럽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면서 군산공장의 생산물량은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2016년부터는 공장 가동률이 20%대로 떨어지고 수출비중도 크게 낮아졌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4월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데 합의하고 신청한 직원들에 대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고 남은 직원들은 향후 3년간 부평이나 청원공장에 전환배치하기로 했다.

군산공장은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임류 인원은 612명이다. 한국지엠은 이들 중 200여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부평, 청원공장이나 기타 부문에 전환배치할



굳게 닫힌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문.

예정이다.

나머지 400여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전환배치할 예정이다. 휴직에 들어간 뒤 첫 6개월은 정부에서 생계보조금을 지원하고 이후 30개월간은 노사가 반반 나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군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이었던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

으면서 지역경제가 초토화되는 게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산의 젊줄로 통한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를 아플 양태 공장이 모두 사라졌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자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상권도 무너져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부족하다는 게 지역사회 평가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공장 부지 활용'을 유일한 대안으로 꼽으며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군산공장에서 올 뉴 크루즈를 생산하라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이나 팩터'에 우는 군산…GM 떠나고 땅값도 '비실비실'



(왼쪽부터) 후진타오 전 주석, 시진핑 현 주석, 장쩌민 전 주석

전북 군산이 이른바 '차이나 팩터'에 물고 있다.

지역 경제를 떠받쳐온 양대 산업인 '조선'과 '자동차'가 물량 공세를 앞세운 중국과 경쟁에 밀려 휘청

하면서 일자리가 주는 등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또 올해 땅값 상승률(공시지가)도 그 여파로 전국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도시 전체가 세계화의 파고 속에 송

군산 땅값, 전년比 1.14% 올라…전국 평균 6.28%

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2018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의 땅값은 전년 대비 1.14%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28%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군산시의 땅값 상승률은 개발호재를 등에 업은 경쟁 도시와 비교하면 더 조리하다. 영어교육도시 개발 사업을 등에 업은 제주 서귀포시(18.71%)의 16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아울러 탑라문화광장을 완공한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인구개발 특구를 조성중인 전남 장성군(13.34%) 등에 비해서도 상승률이 10%포인트 이상 낮다.

군산시의 지가 상승률이 1%대에

그친 데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작년 7월 문을 닫은데다 지역 경제를 먹여 살려온 또 다른 축인 GM자동차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며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인구·상권 이동으로 도심 공동화도 심화됐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조선소 폐쇄, 자동차 공장 가동률 저하의 불똥이 뛰며 인구도 줄고, 상권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지가 부진'의 이면에는 이른바 '차이나 팩터'가 자리잡고 있다. 그 발단은 지난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브 프리임 모기지 위기로 미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그 위기의 불씨가 유럽으로 번져가면서

세계 해운업 물동량이 급락한다. 이어 경영위기에 내몰린 해운사들의 선박 수요가 줄자 일감이 뚝 끊긴 국내 조선사들도 위기로 내몰린다.

현대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의 위기를 심화한 정본인은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정부다. 후진타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불똥이 중국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려 4조 위안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했다.

이 돈은 조선업을 비롯한 국유기업으로 대거 흘러 들어가며 이 분야의 과잉생산을 부른다. 홍성국 전 대우증권 사장은 "중국은 2009년 이후 조선업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조선업은 구조적으로 끝난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지역경제를 떠받쳐온 또 다른 축인 GM의 군산 공장도 이러한 '중국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상하이GM이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을 앞세워 이 자동차 회사 글로벌 경영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한국GM은 그 위상이 쪼그리들면서 생산물량 등

이 갈수록 위축돼 왔다는 것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첫차를 출시한 지 22년 만인 31일 문을 닫았다.

이러한 중국 변수는 군산의 지가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를 아플 양태 공장이 모두 사라졌다.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자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상권도 무너져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군산은 일제 시대 조선에서 생산한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는 대표적인 수출항이었다. 또 조선업과 자동차 등 일제 성장 엔진을 가동하며 한때 호남 경제를 선도하는 등 빠른 성장을 했다.

하지만

중국 변수에 흔들리며 일자리는 줄고, 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주택

연구원

관계자는 군산 등 일자리

가 사라지는 도시에서 '노사생'이

해법이 될 수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그는 "군산도 이번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특정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